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Korean Union of Public Science and Technology workers (KUPST)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담당 기자 등
발 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연택]
연 락 처	담당: 오수환 조직국장(010-6437-1032)
배포일시	2024년 4월 5일 14시
제 목	과기연구노조, 주요정당과 22대 총선 정책협약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 체결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연구노조는 4개 주요 의제와 각 의제별 실천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협약(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제안했고 두 당은 흔쾌히 협약 체결에 응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이번 협약 체결의 내용을 두 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두 당은 총선 승리 후 정책협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2024년 4월 5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위한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요구안 ■

1.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및 출연연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조항 명문화
- ▶ 4대 과기원법 개정 및 과기원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조항 명문화
- ▶ 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기준 및 운영기준 마련
- ▶ 정부 관료와 기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설계가 아닌, 연구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개선안 마련
- ▶ 나머지 연구개발목적기관들의 추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2.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

- ▶ 일방적으로 삭감된 R&D 예산을 2024년도 연내에 추경을 통해 추가 복원하고, 2025년도 예산부터는 전면 복원 및 추가 증액
-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재검토
- ▶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안정적 R&D 투자를 보장하는 조항 신설
- ▶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의 부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재의 R&D 혁신방안 추진 중단, 연구 현장과 소통을 거쳐 새로운 정책 마련

3. PBS 폐지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 ▶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전면 혁신하여 새로운 연구자 중심의 Post-PBS 제도 마련
- ▶ 공공연구기관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의 안정적 지원을 법률로 보장
- ▶ 정부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설치
- ▶ 국회 과학기술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내 (가칭)과학기술처 설립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운영구조를 개편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가칭)연구원 평의회를 설치하여 민주적 운영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4. 출연(연) 리더십 개선 및 구성원 사기진작책 마련

- ▶ 기관 운영 공백을 초래하는 기관장 선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기관평가편람에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 평가를 반영하고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현장 구성원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견 반영
- ▶ 연구기관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 연구기관 무기계약직 등 과도한 차별을 방지하고 처우 개선
- ▶ 연구기관 자회사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제안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개혁안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 과기출연기관법을 개정하여 출연연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한다.
- ▶ 4대 과기원법을 개정하여 과기원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한다.
- ▶ 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기준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 ▶ 정부 관료와 기관 사용자에게 의한 일방적 설계가 아닌, 연구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다.
- ▶ 나머지 연구개발목적기관들의 추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2.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

- ▶ 일방적으로 삭감된 R&D 예산을 2024년도 연내에 추경을 통해 추가 복원하고, 2025년도 예산부터는 전면 복원 및 추가 증액한다.
-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 ▶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안정적 R&D 투자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의 부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재의 R&D 혁신 방안 추진을 중단하고 연구 현장과 소통을 거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다.

3. PBS 폐지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 ▶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전면 혁신하여 새로운 연구자 중심의 Post-PBS 제도를 마련한다.
- ▶ 공공연구기관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의 안정적 지원을 법률로 보장한다.
- ▶ 정부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 ▶ 국회 과학기술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내 (가칭)과학기술처 설립을 추진한다.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 운영구조를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4. 출연(연) 리더십 개선 및 구성원 사기진작책 마련

- ▶ 기관 운영 공백을 초래하는 기관장 선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 기관평가편람에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 연구기관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 연구기관 무기계약직 등 과도한 차별을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 ▶ 연구기관 자회사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202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회 의장 이 개 호

위원장 최 연 택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협약

조국혁신당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제안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개혁안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 정부 관료와 기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설계가 아닌, 연구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다.
- 무분별한 연구개발목적기관들의 추가 공공기관 지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2.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

-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고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의 부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재의 R&D 혁신방안 추진을 중단하고 연구 현장과 소통을 거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다.

3. PBS 폐지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전면 혁신하여 새로운 연구자 중심의 Post-PBS 제도를 마련한다.
- 민주적 운영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운영구조를 개편한다.

4. 출연(연) 리더십 개선 및 구성원 사기진작책 마련

- 기관 운영 공백을 초래하는 기관장 선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연구기관 평가편람에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 평가를 반영하고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현장 구성원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 연구기관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구기관 무기계약직 등 과도한 차별을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2024년 4월 2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 연 택

최 연 택

조국혁신당

대표 조 국

(정책위원회 의장)

서 왕 진